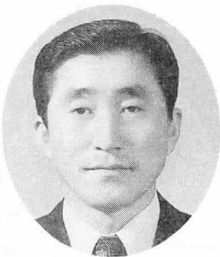




가축분뇨는 자원이자

1. 머리말

모든 생명체는 흙에서 왔다
가 수명이 다하면 다시 흙
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요, 불변의 진리이다. 지구
는 이와 같은 순환을 영원전부
터 되풀이하여 왔고, 영원한 미
래까지 되풀이될 것이다.



정 영 채 박사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위원장)
중앙대 축산학과 교수

최근 온세계는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고 외치고 있고,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열대림의 감소, 사막화와 야생동물의 감소 등 자연의 파괴와 생태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운동과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1992년 6월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는 “아젠다 21”로 환경 온난화 방지 조약, 산림에 관한 원칙 성명, 지구환경 기금 확충 등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산업의 발달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

구의 집중화로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식량문제를 앞지를 만큼의 국가적 차원의 큰 문제로 부상되었고, 일반 산업장에 적용되던 환경보전법은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는 산업인 축산업에까지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UR협정에 의한 축산물의 개방은 국토의 면적과 사료자원문제 등 제반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근히 유지해 온 우리의 축산업을 참으로 어려운 처지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식량으로서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목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환경의 규제 단속에 쫓기는 처지가 되었고, 양축가는 범법자가 안되려면 축산을 포기까지 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에 놓이

게 됐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축산분뇨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다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2. 축산분뇨는 완전 자원(유기질비료)화 되어야 한다.

우리 국토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척박한 땅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남달리 부지런했는지도 모른다. 사람의 분노까지도 국토를 비옥하게 하기 위하여 한줌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던 것이 옛그제의 일이었다. 그러나 어느날부터인가 그 척박한 땅을 화학비료에만 맡겨 산성화시키면서도 가축의 분뇨를 공장폐수와 같이 폐기물화하고, 오염원의 주범으로 만들어 버렸다.

지난날 우리 축산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오늘의 축산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고, 오직 축산물을 증산하는데만 일념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가축의 분뇨가 우리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나쳤고, 분뇨의 처리와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도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상황은 크

게 달라졌고, 우리의 축산업은 환경문제에 의한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주변상황은 우리 축산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입장이 되었다. 아무튼 자의건, 타의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과거에 미련을 가지



말로만 유기농법이니
토양의 산성화 방지니
하는 것은 공론에
불과하다. 가축의
분뇨는 우리가 가장
얻기 쉽고 값싼
유기질비료의
원료이며, 가축분뇨의
비료화, 자원화는 바로
자연의 순리에
적응하는 것이 된다.



고 현실에서 안주하고 지내려는 방어적인 생각을 버려야 할 때다. 우리 스스로가 가축의 분뇨를 자원화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법적 규제 이상으로 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축산이 있음으로서 비옥한 국토, 아름다운 국토,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축산인이 보여줘야 할 것

이다.

UR타결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개방은 우리의 축산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고 있고,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환경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부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거의 모든 산업이 환경과는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서는 환경쪽만을 보는 정책을, 농수산부서는 농산물의 증산만을 보는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다면 생산과 환경문제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할 자연의 순환적 순리를 벗어나 영원히 평행선상에서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비생산적인 경쟁은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는 것이며,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인간은 먹을 것과 쾌적한 환경 두가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현실이 있고, 정부의 고충이 있다. 그러나 축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자연보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가는 가축의 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론짓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결론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천과정이 문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말로만 유기농법이니 토양의 산성화 방지니 하는 것은 공론에 불과하다. 가축의 분뇨는 우리가 가장 얻기 쉽고 값싼 유기질비료의 원료이며, 가축분뇨의 비료화, 자원화는 바로 자연의 순리에 적응하는 것이 된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산업으로 되어 있다. 최근 일본은 UR 협정후 축산분뇨의 처리를 위하여는 “무이자·무기한 융자”란 이름으로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로서 축산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법은 제정된 정신이 중요하다. 수처에 얽매인 법의 제정과 운영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갈등만을 유발하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오늘과 같은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다. 목표의 설정이 잘못되고, 실천이 불가능하며, 과학적인 근거가 결여된 규정의 실천은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국가적으로 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자연의 순리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하여는 축산법, 환경법, 비료관리법 등이 현실적이고 생

산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며, 실효성있는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우리는 환경에 관한 전문가 결핍증에 걸려 있다. 정부에 환경부처가 생긴지 오래되지 않으나,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부처의 격상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환경문제는 앞으로 더욱 폭넓게 적용될 것이고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는 외국의 법과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모르나, 환경전문가가 극히 제한된 수에 불과하며, 특히 축산분뇨의 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환경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교육기관과 시설도 서둘러야 하며,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과 양축규모에 적합한 분뇨의 처리시설과 처리방법의 연구를 위한 지원도 시급히 요구된다.

3. 맺음말

농촌은 자연환경이고 축산산업을 비롯한 농업은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산업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정상

적인 생활환(生活環)의 영속(永續)을 위하여는 인간과 생물이 만든 오늘의 분뇨를 비롯한 오물과 폐기물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를 위한 새로운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시켜 활용하는 길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와 축산인은 합의와 신뢰로 축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토의 비옥화,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일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축산산업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자원을 공급하고 환경을 개선, 보존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